

# 미세먼지 유발물질 5년내 40% 줄인다

##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총량관리 사업장 1100곳으로...노후차 규제강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제도가 대폭 확대돼 2024년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구역 내 기업들의 연간 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제한하는 총량관리제를 1100여개 사업장에 시행하며,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이들은 친환경 기준에 걸맞게 차량을 정비해야 한다.

공사 중 100억 원 이상 토목·건축 사업에는 자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차량 소유자 정부 지원은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자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우선한다.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제 관련 주요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 공개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 바람과 지역 발전,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국화’길 따라서 6일 울산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국화 전시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형형색색 활짝 핀 국화꽃을 감상하며 가을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 檢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철저 수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범시점은 급주 안이 될 예정이다.

수사단장은 임관혁 안전지정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맡는다. 특수단 사무실은 급명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질 예정이다. 규모는 단장 1명, 부장검사 2명, 검사 5~6명 등이다.

대검 지휘부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끄는 반부패·강력부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선실 내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되었다.

사찰위는 또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조작 의혹,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병원 이송용 헬기를 해경청장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희생자 발견·이송이 늦어

졌다

것이다.

이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검찰의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 등 122명을 오는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족협의회의 고발 대상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조사 방해 세력’으로 포함되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든 의혹이(수사) 대상이지만 기본적인(희생자 이송) 부분, 특히 4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수사 요청도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게 있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 “文의장 ‘강제징용 기금설립안’에 분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놓겠다고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6일 “문화상 국회의장의 ‘2+2+a(알파)’ 기금설립안 제안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 외제에 대학 특별강연에서 한일갈등의 배경이 된 일본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징용의 책임이 있는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을 모으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내

단체는 이에 대해 “과연 이 제안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장의 목소리가 맞는 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돈 몇 푼 받고 떠드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책임지고 사죄해야 할 기해자 일본 정부를 뺀 채 일본 전범기업, 한국기업, 양국 민간 기부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이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슈 판결

## 남의 통발 827개 가져간 40대 어부, 절도 혐의 ‘무죄’...왜?



조업에 필요한 통발 827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단독 박형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하순 중 B씨 소유의 시가 31만원 상당의 통발 60개를 가지고 가는 등 6차례에 걸쳐 427만원 상당의 통발 827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통발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통발을 함께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통

발 수거 과정에서 다른 통발의 줄과 서로 엉켜있어 철거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누구의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줄을 자르고 통발을 수거해 배에 싣고 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부득이하게 엉켜있는 통발의 줄을 자른 후 소유자들이 찾아갈 것을 예상하고 선착장이나 공터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를 처분·은닉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A씨가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통발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통발을 이용·처분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20차례에 걸쳐 통발 조업을 해 수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뉴스1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데치로공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임신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